

선진국의 다문화 교육정책 및 사례연구

2018년 6월

정 미 경

〈 목 차 〉

| | |
|--------------------------------------|----|
| □ 국외훈련 개요 | 1 |
| □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 2 |
| □ 연구보고서 | |
| I 서론 | |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
| 2. 보고서 구성 | 5 |
| II. 본론 | |
| 1. 이론적 기초 | |
| 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접근방법 | 6 |
| 나. 시민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등 이해 | 9 |
| 2. 호주 | |
|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 12 |
| 나. 정책특징 | 13 |
| 다. 사례분석 : 언어교육 | 15 |
| 라. 시사점 | 16 |
| 3. 프랑스 | |
|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 17 |
| 나. 정책특징 | 18 |
| 다. 사례분석 : 언어교육, 사회기관 | 19 |
| 라. 시사점 | 23 |
| 4. 독일 | |
|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 24 |
| 나. 정책특징 | 25 |
| 다. 사례분석 : 베를린시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 26 |
| 라. 시사점 | 32 |
| 5. 일본 | |
|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 33 |
| 나. 정책특징 | 35 |
| 다. 사례분석 : 후쿠오카시 다문화공생정책 | 38 |
| 라. 시사점 | 39 |
| 6. 싱가포르 | |
|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 41 |
| 나. 정책특징 | 41 |
| 다. 사례분석 : 언어교육, 다문화 현장학습장 등 | 44 |
| 라. 시사점 | 49 |
| III. 결론 | |
| 1. 정책제언 | 50 |
| 2. 맺음말 | 54 |

참고문헌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싱가포르

2. 훈련기관명 : 리관유 스쿨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3. 훈련분야 : 복지 · 교육(교육)

4. 훈련기간 : 2017. 7월 ~ 2018. 7월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 | | | |
|---------|---|--------|---------------|
| 성 명 | 정미경 | 과견연도 | 2017.7~2018.7 |
| 훈련분야 | 복지 교육(교육) | | |
| 훈련과제 | 선진국의 다문화 교육정책 및 사례연구 | | |
| 훈 련 국 | 싱가포르 | | |
| 훈련기관 | 리관유 스쿨(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 | |
| 보 고 내 용 | | | |
| 제 목 | 선진국의 다문화 교육정책 및 사례연구 | 보고서 매수 | 56 |
| 내용요약 | <p>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2009년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106,884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에 달한다. 다문화가족 수는 2015년 1월 기준 약8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들을 조화롭게 우리사회를 다문화사회로 통합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p> <p>본 연구는 동 과제해결을 위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한국과 외국의 각기 특수한 문화·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적 사태를 둘러싼 구성적 측면과 정책의 흐름 측면에서 유사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p> <p>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의 다문화 특징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현황과 함께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해당국가의 다문화 교육정책목표와 정책현황, 주목할 만한 정책내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개별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사례들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가 국내 다문화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정책제언 하였다.</p> | |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를 대표하는 정보화와 세계화는 국가끼리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 인적 자원의 교류 또한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국가단위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은 무의미해지고 불가능해지고 있다. 국가끼리 상호의존성의 확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으로의 노동자 이동으로 시작된 인적 자원의 교류는 이제 전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물리적인 거리를 축소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 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바꾸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 현상으로 전통적인 국민, 국경, 국민주권의 개념 역시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한 나라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와 문화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주권국가에 기초한 헌법적 패러다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특히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자국 문화·사회로의 통합 방법은 각국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차별과 소외 정책에서 탈피한 새로운 통합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들을 소수의 타자로서 관리할 대상으로만 여기던 기존의 접근은 이제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 그들을 타자로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국민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역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2009년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1,106,884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2013년에는 1,576,034명으로 2.9%에 이르렀다. 이처럼 외국인 유입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는 2013년 약 75만4000명, 2014년 약 79만5000명, 2015년 1월 기준 약 81만7000명 (30.5만여 가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문화가정의 출산으로 다문화교육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급속한 증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유치원 및 초·중·고교) 역시 8만2536명으로 전체 학생 681만9927명 가운데 1.4%가량을 차지할 만큼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지표에 걸맞지 않게 일각에서는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 냉소적 경향이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성장과정부터 부모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라는 특수성으로 기초학습을 제대로 갖추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더구나 부모 한사람의 인종 다름으로 인한 자녀들이 안아야 할 편견과 차별은 고학년이 될수록 중도포기하는 이른바 ‘탈학교’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탈가정, 탈학교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만큼 심각해지고 이슈화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2006년 하인즈워드의 방문으로 촉발되어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그 자녀들의 언어 교육과 문화 체험 등 소수자 적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문화교육을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교육의 의미로 인식하여 다수자의 인식 전환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동일체 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를 위해,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경험하는 교육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동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시민교육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본 국제비교 연구는 한국과 각 외국의 각기 특수한 문화·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적 사태를 둘러싼 구성적 측면과 정책의 흐름 측면에서 유사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의 특성은 각 국의 다문화 교육의 전개과정과 현상에서 서로 다른 측면이 많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제식민지와 미군정, 한국전쟁, 분단, 이념대립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의 급증이라는 역사적 경로에 따른 특성을 가지는 반면에 예컨대, 호주의 경우는 영국 유형지로 시작된 역사, 1901년 독립과 호주연방 수립, 다문화주의를 국가모델로 선포한 다민족복합사회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를 먼저 겪은 외국 선진국의 정책사례와 방법론은 과도기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의 발전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2.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본 연구인 다문화 교육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을 서술하였다. 본문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 (1)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서는 해당 국가의 다문화 특징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현황과 함께 전체적으로 소개했다.
- (2) 정책특징에서는 해당국가의 다문화 교육정책목표와 정책현황, 주목할 만한 정책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 (3) 사례분석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별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사례들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 (4) 시사점에서는 해당국가의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교육정책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서술된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국내 다문화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정책제언 하였다.

II. 본론

1. 이론적 기초

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접근방법

(1) 다문화사회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 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세계화와 국제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 빈번해 지면서 기존 사회에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새로이 유입되어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사회를 의미 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사회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 노동자와 이질 문화,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형태가 한 가지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같이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인 유형이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형태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한국사회에 유입된 수많은 외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형성한 문화적 특성 내지 다양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가) 동화주의

세계 각국이 이주민을 사회에 수용, 통합하는 방식은 크게 동화주의모델과 다문화주의모델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동화주의모델(assimilationist model)은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그 목표로 한다. 즉, 동화주의모델은 소수인종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자신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인적 변화과정을 통해 이주한 국가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국가에서의 권한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공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해야 한다.

동화주의모델을 채택하는 국가들의 경우 이민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고 각종 권한을 부여 하는 데에도 개방적이다. 다만 이민자들은 출신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탈피해 문화적 적응과정을 통해 결국 국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화주의모델을 채택하는 국가의 정책은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의 전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그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소수인종에게 고유의 문화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지만,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나)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ism model)은 다민족·다문화사회의 통합에 있어 동화주의는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인종 간, 민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보며, 소수집단의 문화적·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인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소수집단이 자신의 특수성을 버리거나 완전한 참여를 제한받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에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모델에서는 각 인종, 민족의 전통적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공적원조를 하고 있다. 더불어, 인종차별 금지,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를 도입하여 각 집단내의 불만의 축적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한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불평등을 없애 국민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려하는 이데올로기이며 구체적인 지도 원리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모델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다. 이는 한 사회의 소수자들도 자신의 문화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 개인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내에서 소수자들의 문화를 존중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의 기본 구성 원리로 채택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이민자들에게 굳이 출신문화를 탈피해 새로운 문화에 동화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출신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상호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즉, 다문화주의에서는 주류문화의 주체들이 소수자들의 비주류문화를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는 소수자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비교 분석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단일한 문화에 기반을 둔 민족국가를 국가 통합의 목표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력의 이동을 허용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책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는 그 문화적 지향, 정책목표와 수단, 다양성과 평등의 개념 등에서 차별화된다.

동화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며, 이주민집단의 동화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동화주의에서는 언어, 문화, 종교적 차이로 인한 소수의 정치적 및 경제적 불평이 자칫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화주의 모델에서는 소수집단이 완전히 주류사회에 흡수됨으로서 인종이나 민족에서 비롯된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동화주의 모델에서 추구하는 평등은 사적 영역에서의 기회의 평등 수준에 그친다. 즉 동화주의 모델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화주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우열,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후자는 전자에 흡수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동화주의 모델은 사회의 소수 인종 통합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 그 외에도 관용을 통한 동화주의 정책은 이주민이 동화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 동화되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분리와 배제로 인해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과 사회적 이질감이 증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이질성을 존중하며, 이들의 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보장해 줌으로서 사회통합을 유지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에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복수로 공존하는 문화는 우열에 의해 열등한 것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적으로 열등하고 소수적인 위치에서 있는 문화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내에서 소수자들의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이념적으로는 동화주의보다 선진적이며 인간적이지만, 실행의 과정에서 많은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정책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다문화주의의 강조는 새로운 양상의 사회집단 간 분열, 양극화와 배제의 문제를 문화적 차이의 강조를 통해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에 순차, 또는 서열을 논할 수는 없으나, 다문화 사회

에서의 정책에 있어서 동화주의에 의한 정책의 개선 내지는 보완적 정책으로 다문화주의가 채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동시에 채택되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류사회에의 조기 적응을 통한 이주민의 사회 안정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동화주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떤 한 이론이나 주장만을 강요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나. 시민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반편견교육, 세계화교육 이해

세계사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반편견교육, 세계화교육의 발생 배경 및 핵심가치, 교육목적, 교육대상 등에 대해 유사성과 상이성을 가진다. 국제사회의 정세나 자국내 사회적 영향을 받으며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등장했다.

국제이해교육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국가들 간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를 상호이해와 교육차원에서 증진시켜 세계평화를 도모하고자 발생했다. 반편견교육은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1980년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세계 속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발산하며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지원 하고 제도적인 '차별'에 대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생했다.

다문화교육은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시민권 운동에 기원을 두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한 성별이나 사회적 계층, 민족적·인종적·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견이나 갈등문제들을 스스로 대처하고 상호 소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발생했다. 세계화교육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세계체제에 대하여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초국적 혹은 세계시민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인류공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발생되었다.

교육목적과 교육대상을 함께 살펴보면, 국제이해교육은 세계평화를 확산시키고자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를 문화와 교육 차원에서 증진하고자 기획되었으며 UN회원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편견교육은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세계속에서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산하며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지원 하고 제도적인 '차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모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성별이나 사회적 계층, 민족적·인종적·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견이나 갈등문제에 스스로 대처하고 상호 소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에 목적을 두고 모든 학생과 시민을 대상을 하고 있다. 세계화교육은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초국적 혹은 세계시민의 질서를 형

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화 현상을 이해시키는 방향과 세계화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WTO협정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있다.

이처럼 국제이해교육, 반편견교육, 다문화교육, 세계화교육 등은 국제사회의 정세나 자국내 사회적 영향을 받으며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등장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현재, 한국사회에 수용된 ‘네 가지 교육’의 개념들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변천과 조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습과 다른 양상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수용 양상은 ‘네 가지교육’들이 서로 교육목적에서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거나 셋 이상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바람직한 교육방향은 국제이해교육에서 요구하는 평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치와 문화 교류를 확장하여 삶의 영역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반편견교육과 다문화교육에선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인간애를 실천 하면서, 세계화교육에서 지향하는 세계인류의 공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세계사적 관점에서 네가지 교육 비교 >

| 구분 | 국제이해교육 | 반편견 교육 | 다문화 교육 | 세계화 교육 |
|-------|---|---|---|---|
| 발생 배경 | 1945년 세계 2차대전 종전 이후 | 1980년대 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시민권 운동 | 1986년 GATT 협정 |
| 핵심 가치 | 평화 | 평등 | 민주주의 | 인류공영 |
| 교육 목적 | 세계평화를 확산시키고자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를 문화와 교육 차원에서 증진 |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세계속에서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산하며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인 '차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성별이나 사회적 계층, 민족적·인종적·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견이나 갈등문제에 스스로 대처하고 상호 소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초국적 혹은 세계시민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한편으로 세계화 현상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 세계화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를 구축 |
| 교육 대상 | UN 회원국가 국민 | 모든 학생, 시민 | 모든 학생, 시민 | WTO 협정국가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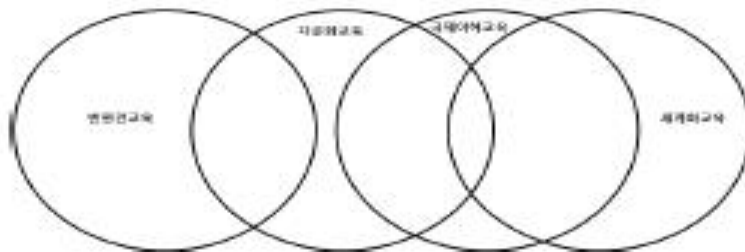
*자료출처 : 다문화와 인간 제5권 제2호, 2016, p.57

< 지역적 특수성에서 네가지 교육 비교 >

| 구분 | 국제이해교육 | 반편견교육 | 다문화교육 | 세계화교육 |
|---------|---|---|---|---|
| 도입배경 | 1980년대부터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관심을 받음 | 1990년대 유아들을 대상으로 장애 성역할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 1990년대 영문학자들의 미국문화의 최신 조류를 소개하는 차원 | 세계화를 강조하는 문인정부(1988년), 1994년 1월 WTO 출범, 한국 OECD 가입(1996년) |
| 핵심가치 | 외국과의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국가적 문화이해교육 | 장애인 성역할 등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차별 방지에 대한 교육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노동자 등 인종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한 차별 방지에 대한 교육 | 세계분세 인식과 해결을 위한 교육 |
| 교육담당 기관 | 초등·중등학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 정부부처, 유아교육기관, 초등·중등학교, 고등학교 | 세계화추진위원회, 정부부처 |
| 교육대상 범주 | 초·중등학생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 사회 전체 |

*자료출처 : 다문화와 인간 제5권 제2호, 2016, p.65

<네가지 교육의 양상>



*자료출처 : 다문화와 인간 제5권 제2호, 2016, p.63

2. 호주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호주는 전체 국민 가운데 이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였으며 현재의 인구는 2016년 4월 현재 24,035,645명 정도로 추산된다. 호주는 총인구 가운데 약 40.6%가 다문화 또는 이주민가정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총인구 가운데 비영어권 출신 비중은 62.1%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 내 비영어권 이주민의 수요 증가와 이들 대부분의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영어교육지원은 호주 다문화 정책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호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 가운데 30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층 인구 가운데 30세 이하 인구 비중은 58%에 이른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호주의 인본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아프리카, 중동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난민 청소년,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지난 60년 동안 이민을 통해 문화·사회적 다양성을 이루었으며 동화주의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한 대표적인 다문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종간의 갈등, 민족간 폭력, 외국인 혐오주의 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호주이민의 역사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보면 1780년대까지의 백인 중심 이주민과 백호주의 정책의 단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비백인계 중심의 대량 이민시기와 백호주의 정책 단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이민은 1799년 영국의 식민지이자 죄수의 유형지로 처음 시작되었고 1830년대 이후 정부 보조를 받은 자유 이주민들이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호주는 백인 중심의 국가를 형성하고 백호주의라 불리는 백인 중심의 동화정책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주민인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과 이민제한법을 통한 유색인종 이주민의 규제가 이어졌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 후 정치·경제적 필요성에 따른 이민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호주는 전략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수용하게 되어 1973년 차별금지 이민정책의 제정과 그에 따른 대규모 이민 유입으로 백호주의는 폐기되고 다문화주의가 전격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오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호주사회는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내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몇년전 호주정부가 이민, 다문화부의 명칭을 이민, 시민권부로 바꾼 것을 두고 정치적 보수주의의 반영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후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73년 이후 호주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모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공정책에 반영하는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1989년에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표하고 2000년에는 아젠다 실천을 위한 '다문화 호주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종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다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맞추어 각 주별로 다문화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정책 특징

1901년 1월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호주는 영국식 제도가 정치, 사회의 모델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을 포함하여 아시아계, 중동계,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언어와 민족, 종교, 문화유산을 포용하게 된다. 이리하여 정치, 문화적 특수성이 교육영역에 반영코자 이민아동교육을 하였으며 이주민을 위한 융합과 참여교육의 일환으로 이민센터와 각 학교 야간영어학교, 호주방송협회의 통신영어강좌 등을 통해서 영어는 물론 다양한 사회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호주에서의 다문화교육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리, 독립된 교과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지만 한국이 주로 사회과 교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다룬다면 호주는 다양한 과목들을 통하여 간학문적 방법을 채택하여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즉, 역사, 지리, 문학과 같은 일부 과목들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와 태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화를 배우게 하는 핵심과목이며 미술과 체육 교과와 같은 교과목들을 통해서도 다른 문화의 유산을 존중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중심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 실시한다.

특히 1980년부터 다문화주의를 대외적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 왔고 다양한 소수민족 공동체가 호주 전역에 형성되면서 시민사회영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다문화교육은 호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자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국가인 호주의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전체 역사를 통해서 호주사회의 모든 측면을 다문화성으로 이해할 것을 돕고 호주와 호주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다양한 민족 집단의 주체성과 그들의 기여를 인식하도록 도모한다.

이러한 틀에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에 적합한 학습자의 태도, 가치, 신념을 고양시키도록 하고 민족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국가의 호주인의 정체성과 자신의

고유한 민족정체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첫째, 교과과정에서 다문화주의적 관점, 둘째, 국제이해와 세계체계 인식, 셋째, 다양한 민족연구, 넷째, 문화와 언어교육, 다섯째, 비영어권자를 위한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진다.

방법적 측면 호주의 다문화이해영역 가운데 인권교육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다문화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실시되어 왔다. 1984년 호주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위한 교육과 취학 전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교재를 발간하면서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권교육 사례활동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학교교육에서 자리잡게 된다. 이와 같이 호주의 다문화교육 가운데 강조되는 교육내용과 인권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 사는 호주사회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다루어져왔다. 즉, 다문화교육은 호주사회의 구성원에게 차이와 다름을 통해 도출되는 풍성하고 건강한 다양성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복합문화 사회에서 다원적인 시민권리와 사회통합을 고양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호주정부는 1999년 반인종주의 운동으로써 함께 살아가기(Living in Harmony)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년 3월 21일을 하모니 데이(Harmony Day)로 하고 3-4월 두 달 동안 콘서트, 다문화관광, 다문화강좌, 워크숍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통합과 소통을 꾀한다. 기존의 정부중심의 다문화프로그램에서 체육, 문화, 종교, 학술기관, 이주민단체, 원주민그룹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형태로 전환하고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조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호주 시민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은 방법론에 있어서 참여의 다각화를 강조한다. 특히 2009년에는 거주민의 28%가 외국태생인 시드니시의 경우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타이의 순) 2008-2011년까지 추진한 다문화 전략을 기반으로 다민족공동체의 참여를 장려한다. 커뮤니티 정착 서비스 프로그램, 이주민자원센터, 호주문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다민족 통역관제도, 다문화담당관 신설, 성인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발적 커뮤니티의 참여가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인종, 다문화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일반시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다원성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시민공동체를 구현하는 과정이 시민사회의 다문화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 사례분석 : 언어교육

1970년 국가적 정책기조가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전환되면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제2언어를 가르치고 이민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이것이 1978년 grant services and programs로 발전하면서 다문화교육이 공식화되었다.

호주의 다문화교육은 사회통합과 관용, 호주의 사회의 문화·언어적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아래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학교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이 상정되어 'You + me = us'라는 가치 아래 유소년교육부터 인종주의, 적대와 편견을 해소하고 소수문화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초기에 소수민족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과 언어적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점차 문화의 다양성 존중 교육을 확대되었다. 학생들의 모국어 유지와 발달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모국어 교육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편견과 인종차별주의 및 고정관념에 대한 대처전략 발달을 위한 학교 공동체 프로젝트도 지원되었다, 한편 호주 정부 해외원조 기구에서 통치, 인권, 난민, 여성과 같은 다양한 전 지구적 이슈에 관한 사례 연구와 교육 자료들을 각 급 학교 수준별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는 호주에서 가장 논쟁이 적고 가장 재정 지원을 많이 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이민아동들에게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일은 동등한 교육적 성취와 고용을 보장하고 호주 사회의 여러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그들이 학습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 수준까지 상대적으로 빨리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민아동들을 ESL 교실로 불러내어 별도의 영어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이는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구분되고 고립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동안 다른 중요한 학습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지금은 고도의 훈련을 받고 경험도 풍부한 ESL전문교사들로 하여금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변화되었고, 급우들과 따로 떨어져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도록 ESL이 모든 학습영역의 교과과정 내에 두루 통합되어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영어 이외의 언어(LOTE), 즉 외국어는 중등학교에서 개별 과목으로서만 가르쳤

고, 또 당시에는 프랑스어나 라틴어, 독일어, 스페인어와 같은 유럽 언어들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이었다 1970년대부터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온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호주 학생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다른 민족 공동체들이 가진 언어(community language라고 불림)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언어 학습은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과 타자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언어적·문화적으로 다양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호주 학교에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언어 학습은 모국어의 유지와 발달(대부분의 이주민의 경우처럼), 제2의 부가적 언어 학습(영어 발화자의 경우처럼), 또는 위험 상황에 놓인 언어들의 부활(선주민 언어의 경우처럼) 등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어 이외의 언어는 선주민의 언어를 포함하여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이다

호주는 국가 수준에서 선진적인 언어 정책과 최신의 효과적인 언어교수법을 개발해 왔다. 많은 주에서는 준비단계서부터 10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외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정해두고 있다. 2000년 이후 연방정부는 호주 아동들의 60% 이상이 3학년(8세)부터 아시아권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호주의 많은 초·중등학교에서는 이민자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협조도 있지만 생활영어 지도를 위한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도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에 의하여 이중 언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라. 시사점

지금까지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호주의 경험은 한국의 상황과 달라 이를 바로 한국에 대입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다문화사회가 논의되고 있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려 인권이 확고히 보장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이주민들은 종종 차별을 받았다. 한국도 민주화에 따라 최근 인권 신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호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호주에 비해 오랫동안 높은 동질성을 유지한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문화, 인종, 종교 등에 대해 낯설어 하고 때로는 이들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며 심할 경우 폭력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종종 보도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언어폭력 등은 이를 행한 개인적인 잘못만으로 탓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존중에 두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주류사회는 새 이주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사회에 동화되기를 바랐으나 그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셋째, 오래전부터 다문화사회인 국가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정착된데 비해 역사가 비교적 짧은 호주는 그렇지 못하다. 이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못한 것이지만 호주는 오랫동안 유지하였던 백호주의 영향도 크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이 너무 강하여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을 시사한다. 현재까지는 다문화주의정책 추진에 큰 저항이 없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은 이들 국가의 사례로 볼 때 안이한 생각일 수도 있다.

넷째,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취하고 있는 호주도 이주민 집단 지역에 같은 국가출신의 교사를 배치하고 모국어교육을 실시하며 자녀교육 관련 자료를 이주민 부모의 모국어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안내자료 등은 모국어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나 여타 사항도 자녀들이 커가고 많아짐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프랑스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화, 편입, 통합이라는 세 가지 정책을 차례로 실시해 왔다. 먼저, 동화정책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직후 실시되었다.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자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근국가의 사람들까지 혁명정신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연히 자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혁명정신에 동조한 이들은 프랑스로 망명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들을 환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인접국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또 혁명정신에 자발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와 문화에도 쉽게 동화되었다. 이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족해진 노동력을 메워주는

등 프랑스사회에 적잖이 기여했다. 19세기 말 이전에 프랑스로 들어온 외국인 예술가, 기술자, 상인, 심지어 정치인조차 프랑스인과 거의 마찰을 빚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대규모로 이민 온 남부유럽 노동자 역시 단지 프랑스인에 비해 좀 ‘열등한 사람들’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이었다. 실제로 이민노동자 수가 정점에 달하고 경제위기가 극에 달했던 1930년대에도 이민자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종차별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 바 ‘영광의 30년’ 동안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대규모의 이민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이들은 프랑스인과 인종적·문화적·종교적으로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주로 단신으로 왔지만 1970년대 이후 정착이민으로 전환되면서 프랑스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민2세대가 대거 등장하였고 프랑스사회는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되었다.

이민1세대인 부모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수줍음’으로 살아갔다면, 이민2세대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때로는 부모와의 ‘투쟁’까지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의 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89년에 일어난 히잡(Hijab)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고, ‘프랑스-프랑스 전쟁’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어냈다.

나. 정책 특징

프랑스는 1901년 법령에 따라 국가차원의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프랑스 헌법은 그룹이나 단체, 소주민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차이없음을 존중하며, 학교의 역할은 공화국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시민성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성적인 지식에 접근하고 시민성이란 개념의 기초위에 통일성을 만들게 해주는 것이다. 20세기 초 프랑스 교육부는 대중교육을 통해 인종적, 지역적, 종교적 독창성의 고려를 금지했다. 따라서 공화국의 개념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의 시민으로 고려하면서 학생들을 단일 방식으로 다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30년대의 화려한 시기동안 프랑스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이민정책이 실시됐다. 드골 정부는 1945년 11월 2일 이민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지속적 정착을 위한 칙령을 발표했다. 1973년까지 프랑스는 고 비율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했다. 하지만 에너지 파동에 따른 1970년대 중반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실업위기를 초래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프랑스 이민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1974년 7월 프랑스의 이민정책이 보류되면서 프랑스 학교에서 이민자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태생의 문화를 인정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1970년 이전에는 학생들의 문화적 복수성은 학교의 목표가 공화국의 가치를 따르는 시민의 양성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어린이건 외국 어린이건 학교교육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교육정책은 공화국의 원칙에 따른 차이 없음의 존중이며,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독창성을 금지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여 시민성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1975년의 단일 중학교 창설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주민 학생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취학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1970-1984년 사이에 '차별화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여전히 평등이란 공화국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다문화 교육은 교사나 학교에 의해 문화가 다른 학생들 사이의 상호이해, 협력 등에 한정됐다.

다. 사례분석 : 언어교육, 사회기관

(1) 통합반, 적응반, 통합보강과정반

1970년 초 프랑스 교육부는 이주민 학생들의 학습의 어려움을 돕고자 통합반, 적응반, 통합보강과정반을 개설했다. 프랑스어를 숙달함으로써 이들의 통합과 동시에 학교생활의 성공을 겨냥한 조치였다. 이 과정의 목표는 프랑스어인 국가언어의 통일이라는 틀에서 이주민학생들의 수용과 프랑스로의 동화였다. 모든 반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습득에 기초하며, 교재는 외국인을 위한 언어와 문화교육국이나 프랑스어 보급을 위한 연구소에서 발행한다. 1973년 프랑스 교육부는 비프랑스어권 외국 학생들을 프랑스의 정상수업 사이클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한다.

통합반은 프랑스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나이 6-16살에 프랑스에 도착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초등학교 프랑스어 통합반, 오늘날 수용반으로 불리는 중학교의 적응반과 일부 고등학교의 실험반이 이에 해당된다. 이 학습과정은 1년 이내에 이민 학생들을 프랑스의 보통반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급당인원은 15명 이하로 한다. 통합반은 1970년대 8,0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했고 1976-1983년에는 약 10,000명의 학생들을 1990년대에는 3,6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했다. 적응반의 학생수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고 1970년대 1,500명에서 1990년대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통합반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의 1%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과반수가 파리, 리옹 마르세유에 거주했다. 통합반은 원칙적으로 비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학생들과 동남아시아의 학생들을 수용했다. 마찬가지로 적응반은 유럽 학생들과 터키 그리고 일부 프랑스 학생들로 구성됐다. 통합보강반은 보통반에 속한 소그룹 학생들로 주당 7-8시간의 수업이 진행된다.

(2) 사회기관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공교육 외에 여타의 기관들에 의해서도 행하여진다. 이 기관들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이나 아데나워(Adenauer)재단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교육과 비견되나 다문화 시민교육의 성격이 강화되어 있는 점에서 다르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ELCO(Enseignements de Langues et de Cultures d'Origine)

이민자 가정이 프랑스로 이주한 후 초기에 겪는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운용한 '이민자들의 언어와 문화 교육' 과정이다. 1970년대 중반 프랑스는 이민제한 완화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프랑스 체류가 끝난 후 모국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민 자녀들이 정규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게 할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7개국 협약으로 모국의 언어, 문화 교육과정이 운용되었다

1975년 프랑스 교육부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튀니지, 모로코, 유고, 터키, 알제리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이주민 가정의 재그룹화 정책의 틀에서 ELCO를 창설했다. 출신지 언어와 문화교육 센터가 학교통합을 유리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ELCO의 시행은 중립성-정교 분리원칙 위반으로 차별화의 접근으로 제시됐다.

1973년 2월 2일 법령은 주당 3시간씩 출신지 언어교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프랑스 학교에서 문화적 이타성을 공식화했다. 이 센터의 교육담당은 출신지 국가에서 온 교사들이 담당했고, 교육프로그램은 출신지 국가 교육부가 수업시간은 프랑스 교육부가 협력했다. ELCO의 시행은 이민자 학생들의 재통합을 용이하게 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1978년 7월 25일 법령을 통해 이주민 학생들의 학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이주민 학생들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에 입문과정과 통합 보강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중학교 과정에 적응반을 운영하였다. 둘째는 초등학교 수준의 모국어 교육, 초등학교의 제3시간의 틀에서

출신지 언어교육, 중학교에서 수업시간 이외에 출신지 언어와 문화교육을 위한 지역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ELCO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사회와 격리시켰을 뿐 아니라 교사들 또한 적합한 교육을 이수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 개인의 학습의 수준에 바탕을 둔 다양한 학습을 고려하지 않은 나이와 문화에 따른 교수였기 때문이다.

. (나) CEFISEM·CASNAV

프랑스는 1975년 '이민자 자녀의 취학을 위한 교육과 정보 센터'인 CEFISEM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이민자 출신 가정의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적응반', '통합반', '재수강반' 등을 두었다. 2002년에는 명칭을 CASNAV 즉, '새로운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취학을 위한 학술 센터'로 바꾸고 보다 전문화 하였다. CASNAV는 최근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시민교육 전담기구 중 하나이다. 초·중등학교 이주민 자녀들의 취학을 돕고 이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주민 자녀들의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특별반을 운영하며 외국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육자들에게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과 특별반 교사와 일반 교사들 사이의 정보망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강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다) ZEP(우선교육지역), REP(선 교육 네트워크)

ZEP는 1981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1916~1996) 정부 출범 초기 '적게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이라는 기치하에 학업 부진 지역의 교육 활동을 강화해 교육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입안되었다. 그 일환으로 '우선 교육지역(Zoned'Education Prioritaire)'을 설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① 보편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②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한 시민교육, ③ 이민 출신 아동들의 언어교육 지원, ④ 미디어를 통한 영상교육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2013년에는 전국의 9,00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ZEP를 REP(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즉 '우선 교육 네트워크'로 변경하였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프랑스의 경우 공교육은 국가가 교육을 통하여 공화국이 지향하는 사회질서와 시민을 양성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국가와 공교육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공교육은 시대적 상

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동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교육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위에서 예시한 기관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는 한국사회가 한층 더 고도화 되고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면교사가 됨과 아울러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라) 프랑스 다문화교육: ELCO에서 CASNAV로

상호문화 용어의 도입과 동시에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민자 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1975년에 처음 실시된 것이 이민자들의 ‘자국 언어-문화 교육’(엘코[ELCO])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ELCO 프로그램은 그 시작부터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준비시켜주기 위한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프랑스 사회에 영구 정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그들 자녀를 위한 이른바 ‘차별화’ 교육이 프랑스 사회 내에서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들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학교 내로의 통합을 위해 1975년부터 1984년에 걸쳐 프랑스 전국에 ‘이민자 자녀 학교적응을 위한 정보센터’(세피셈[CEFISEM])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센터 차원에서 초등학교 내에는 ‘통합반’(클랭, CLIN)을, 중학교 과정에는 ‘적응반’(클라드, CLAD)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던 CEFISEM은 2002년에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취학을 위한 교육센터’(까스나브[CASNAV])로 대체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CEFISEM이 CASNAV로 전환되면서 CASNAV는 기존의 CEFISEM에서 맡던 임무에 덧붙여 몇가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교의 인력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CASNAV는 각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2002년에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된다

“CASNAV의 활동은 프랑스에 새롭게 정착한, 아직 프랑스어에 서투른 자녀들이나 비정착 자녀들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즉, 그들의 안내 단계에서부터 일반학급으로의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 CASNAV에서는 교육적, 인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 이외에 그들 가족들과의 협력 및 중계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CASNAV가 맡고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학생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을 돕는다. 둘째, 외국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당 교육자들에게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을 한다. 셋째, 특별반 운영교사들과 일반 교사들 사이의 정보망 역할을 하게 된다.

라. 시사점

프랑스는 아직 완전한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할 정도로 이주민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복잡한 인종 구성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성공적인 통합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된 데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된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프랑스의 시민교육제도의 운용이 큰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 미국, 캐나다 등과 더불어 시민(정치)교육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첫째, 정부 당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시민교육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기관과 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시민교육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용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교육체계를 통합, 재편성함과 아울러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교육을 전담할 기관은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입안, 각종 콘텐츠의 개발과 제작 등은 물론 정책 전반에 관한 제언과 더불어 민관정(民官政)을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운용중인 'CASNAV'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다문화·시민교육 체계를 구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문화 특별학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형편 상 교육 소외계층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학업 중도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자녀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한국어 능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들의 정규 학급 과정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도구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필수적인 요인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프랑스의 특별학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

어 습득이며, 이 한국어는 기타 교과목(사회, 도덕 등)의 도구어로서 역할을 하기에 한국어 능력 부족은 전반적인 학습 부진과 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 독일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독일은 이민국이 아님을 내세우면서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학생들까지도 일어나 학업이 끝나면 귀국정책을 현실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독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들까지 독일로 불러들이면서 독일에서의 외국인 숫자의 증가는 지속되었고, 이에 독일 정부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독일은 1990년 외국인법의 개정과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정권이 들어서면서 2000년 국적법의 시행, 2005년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의 시행으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국적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통합정책을 시작하였다. 이제까지의 외국인법, 망명절차법과 유럽연합 국가 국민의 이주자유법 등을 포함하게 되는 이민법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의 완화, 외국인 이민의 조절과 제한 그리고 현재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과 아울러 유럽연합국가 국민의 체류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새 이민법의 이민규정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고급 외국 노동인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세부적 장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범죄혐의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2015)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독일의 인구는 80,897,000명이며, 이들 중 16,386,000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이다. 16,386,000명 가운데 9,176,000은 독일인이며, 7,211,000은 외국인에 속한다. 즉, 5명 가운데 1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며,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독일인이다. 지역적 분포로는 서독지역에서는 4명 중 한 명이, 동독지역에서는 20명 중 1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96,4%가 서독과 베를린지역에 살고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 3분의 2는 스스로 독일로 이주를 하였고, 3분의 1은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

들이다.

독일은 최근 십년 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 중에 있다. “독일은 이민국이 아니다”라고 외치던 독일정부는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독일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연봉 4만 4,000유로 이상 외국인에게 비자를 내주는 블루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EU 27개국의 만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1년 17.5%에서 2060년 29.5%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노인 증가와 일하는 청·장년층 감소에 따른 고비용·저성장은 유럽 전체가 직면한 문제다. 2010년 유럽 청·장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60년에는 그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독일은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및 독일 거주 외국인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거시적인 통합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통합노력을 하고 있는 베를린시는 지역적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서울시의 다문화 교육, 통합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정책 특징

실상 독일은 단기취업 후 반드시 모국으로 귀국할 것을 서명한 이주노동자에 한해서만 자국 내 입국을 허용한다. 즉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손님 노동자 또는 초청노동자 : Guest Worker Program)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자국으로 귀국해야하며 그 빈자리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대체되는 교체순환정책을 채택하였다. 1955년부터 1973년까지의 독일 다문화인에 대해 살펴보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국가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협정을 체결하고 약 260만명의 초청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초청노동자제도는 국가에 의해 모집되고 다문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통제를 가하며 내국인을 우선시하고 단기순환하는 원칙을 유지하였다. 독일은 1973년 외국인노동자 고용 중단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1975년 다문화인의 수요가 증가한 것은 독일에 정착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국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을 초청하면서 본격화된 가족재결합의 영향을 크게 입은 것이다.

1970년대에는 많은 다문화인이 거주하는 국가로 변모하였으며 터키출신을 포함한 무슬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유럽내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독일정부는 다문화인에 대한 통합정책보다는 외국인노동자와 가족의 정착에 대한 통제와 자국귀환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들에게는 장기체류특별노동허가를 부여하였고

1980년에는 18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입국한 청소년 가운데 일정한 보통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5년의 특별노동허가를 부여하였다.

다문화 교육정책은 독일어교육에서 출발한다. 다문화인들이 현지 언어에 유창하면 그 만큼 현지인들과의 간격도 좁혀지기 때문이다. 또 독일사회의 교육, 노동, 복지의 혜택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취업의 기회도 많아진다. 독일이 2011년도 언어교육과정에 투입한 예산은 224만 유로(약 2,500억원)로 다문화인들 10만 여명이 통합과정교육에 참여하였는데 독일의 문화와 역사 등의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적응과정을 포함하여 의무수업만 9백 시간에 달하며 문맹, 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특별언어지도까지 더하면 최대 1,200시간으로 늘어난다. 2010년에 독일은 사회통합과정에만 2억 1,800만 유로(약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적극적이다. 독일 여성 내무부장관은 2010년초부터 2012년초까지 진행된 9번째 외국인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다문화인들의 학력이 신장되었다고 밝히면서 법률개정으로 외국이주민의 학력인정과 법률적 독립성이 인정됨으로써 언어와 일자리, 직업교육, 학력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독일의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였으나 외국이주민의 수요는 증가하였고 오늘날에는 외국이주민의 절반이 독일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독일연방가족부는 '더 강하게 일찍부터 기회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백만 유로를 4천개 주요 보육시설과 다문화어린이들의 언어축진을 위하여 투자하였다.

다. 사례연구 : 베를린시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중의 선두주자에 속한다. 2015년에 발간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베를린 인구는 3,469,800명이며, 그 중 외국인 숫자는 496,500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 베를린은 독일 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통합개념을 담은 이주민정책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비전은 '다양성 고취-결속력 강화'로서, 이주민과 독일주민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의 대립적 목표를 내걸었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제정한 동화주의적 이민법이 베를린 시의 통합적 이주민 정책수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베를린은 통일 이후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의 증가, 도시 내 노후주택과 재개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도시 중심부에는 이주노동자와 빈

곤충이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사회적 분열현상도 나타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대적인 도시정비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를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베를린 시가 내놓은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역관리 전략과 2005년 베를린 통합정책이 그것이다.

사회통합적인 도시를 만들 목적의 도시개발 정책 프로그램인 〈베를린 시내 인근 지역 개발: 사회통합적인 도시(Neighborhood Management in Berlin)〉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편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총 15개 지역이 ‘특별한 개발적인 필요를 지닌 지역’으로 선정되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2004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후 해당지역을 34개로 확대해서 시행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과 이민자 출신 주민들이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독일어 강습과 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개발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이웃들 간에 서로 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이어서 베를린 시정부가 다양성 존중과 사회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정책이 베를린 통합정책(integrationspolitik in Berlin, 2007-2011)이다. 지역관리 전략 등 부문적으로 취해지던 이민자 통합문제를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통합적인 정책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통합정책의 주안점은 베를린의 민족적 다양성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베를린의 미래를 위해 이 자원의 잠재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한 이질적 문화 간 상호이해 증진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통합을 주안점으로 하는 통합정책이 수행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이민자 간 매개체를 구축하되, 이것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협의체 개념으로서의 연결점이다. 베를린 통합정책은 지방정부로서 처음으로 통합개념을 담은 이주민정책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정책목표와 실행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통해서 2007년 드디어 ‘다양성 고취와 결속력 강화’라는 아젠다를 내세워 7가지 주 핵심내용과 46가지의 실천전략이 완성되었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적인 매력과 문화적 다양성

베를린 시는 유럽의 메트로폴리스로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여 전 세계에서 예술과 문화의 도시 베를린을 찾아오는 젊은 예술가들과 연구자들, 학생들을 위한 도시임을 홍보한다. 문화적 다양

성을 강조하고, 시의회는 이주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개인적 작업 역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촉진한다.

2008년에 개최되는 ‘intekulturellen Dialogs 2008’ 축제에 베를린시를 최대한 홍보하고, 캠페인과 지원에 참여한다. 또한 새로운 이주민들을 위하여 베를린 시의 홈페이지에 베를린 웰컴 패키지(Willkommen in Berlin)를 7개의 언어로 제공한다. 새로운 이주민들이 처음으로 외국인관청이나 시청을 방문 시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은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관청(Ausländerbehörde)은 새로운 이주자들을 위해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가나 고학력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2)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사회적 통합을 결정하는 척도는 노동시장 참여에 달려있다. 이민자들의 언어이해와 노동시장의 참여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하며,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이 학교에서 직업교육까지 보다 더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다.

첫째, 지난 몇 년 동안 일자리를 잃은 노동이민자들이 다시 직업교육을 받고 일 자리로 돌아가서 국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직업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민자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료주의적이고 법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캠페인 “베를린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Berlin braucht Dich)”를 내걸고 이민자 청소년들이 공공부문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베를린 관청에서 우리는 독일인이 아닌 젊은 청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직업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6년 이주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공공부문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베를린 시는 이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성공적인 통합정책은 어린이 주간시설과 학교의 교육방침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어린이 주간보호시설과 학교는 젊은 이민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통합장소이다. 베를린 교육정책의 목표는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님과 그들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나로 묶고, 문화와 사회전반의 기본적인 지식을 중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력평가 프로그램) 조사를 통하여 독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이민자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취약한 것이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부족한 언어 이해력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 실패의 원인임을 인지하고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고, 이것은 실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교육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서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것은 수준에 따라서 가능한 입학 전에 습득하는 것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베를린시는 다차원가족포털사이트로서 “Zuhause in Berlin”을 개설하였다. 이것은 가족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적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베를린시가 ‘가족우호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베를린 시 가족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내어서 베를린시와 구청, 관련기관, 프리랜서 등이 3년간의 협업을 통하여 개발한 것이다.

(4) 사회적 공간의 화합 강조를 통한 통합

도시의 사회경제적·공간적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자 가정이 집중된 낙후지역을 안정시키고, 낙후지역 주민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도시의 화합을 강화하는 것이 도시화합을 통한 사회통합의 목표다.

도시화합은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고, 높은 실업율과 노동시장참여의 저조와도 연관성이 깊다. 도시의 공간적 개발전략을 통하여 이웃 간에도 서로 화합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공간과 지역적 분배를 위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이주민들의 요구와 안정을 도모하며,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사회시설을 개선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특히 관청과 기관의 문화적 개방을 통하여 가능하다. 또한 이웃 간의 협동 체계와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며, 이주배경의 유무에 상관없이 베를린 시민의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스

포츠를 통한 통합). 이와 같이, 베를린 시정부는 지역관리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택한 후 지역관리팀을 구성, 자치단체와 협동하고 자치구조직과 자원활동 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베를린 자치구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은 시민참여와 자발적 활동, 그리고 정치적 참여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5) 문화 간 개방을 통한 사회통합

성공적인 통합정책에는 베를린 관청과 사회 기관들이 새로운 고객중심의 서비스 창출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이고 성공적인 통합정책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도움과 지지를 펼치는 것이며,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이 열려 있어야 하며, 이들 상호간에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6) 시민사회 참여 및 강화를 통한 통합

이는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강화시키고, 인정과 동등한 대우의 문화를 촉진하고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며, 하위목표는 아래와 같다.

- 베를린에서 시민권자 숫자를 증가시키는 일
- 사회통합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
- 이민자 통합의회와 위원회의 개방을 통한 정치 참여 가능성 개선
-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적인 무시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차원의 업무 확대
- 젊은 남성 이민자들의 일자리 확대
- 자주적인 삶의 패턴을 실현할 수 있는 공급 소스 확장

이와 관련하여, 베를린시의 통합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오늘날 베를린에서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다른 기관들과 공동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베를린 시의회는 통합협의회를 이민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기능을 유지·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이민자 대표들은 이민자들의 관심을 전달하고, 정치적 결정과정에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베를린 통합 컨셉이 2005년 8월에 시작된 이후 통합협의회는 시의회에 2006년 2월 학교에서의 윤리교육소개를 제안하였고, 2006년 5월에 이

주배경을 가진 아동들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독일 시민권자 숫자를 증가시키는 목표 역시 정보캠페인과 활동 등을 통하여 2006년에는 2005년보다 15%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베를린통합 정책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룬 성과였다. <Amt für Statistik Berlin-Brandenburg>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독일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 중에는 터어키인이 가장 많았고, 러시아, 폴란드, 구 소연방국적의 비율이 높았다.

(7)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

베를린시의 통합정책은 난민 신청자들과 장기 대기자들에게 자립생활을 주고자 하고 있으며, 통합정책의 가장 최종 목표인 사람들은 난민들이다. 이것은 베를린 통합 컨셉이 다른 연방주들과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난민들은 정당한 통합기회를 가지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인지하게 된다. 체류 권한이 없는 사람들도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베를린 의회는 기금마련을 통하여 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가 수립되었는데, 정치적 추방자들을 수용하고, 난민신청자들과 대기자들이 자립적 생활을 위한 좋은 공간적 조건을 마련하며, 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와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체류허가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오랫동안 대기해온 난민대기자들에게 직업교육에 대한 길을 마련하고, 체류허가가 없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와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베를린의 성공적인 통합정책을 위해서 베를린 시의회와 지역사회는 협동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통합정치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역사회, 외국인통합협의회 그리고 통합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고, 충분한 의견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통합정치적인 공동작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지역구별 통합프로그램 개발
- 지역구별 통합협의회(7개 지역별) 구성
- 지역구별 통합위원회 설치

그 외에 대표적 이주민 참여 네트워크인 이슬람포럼(Islam forum)은 2005년 11월에 베를린 통합위원회와 독일의 무슬림 아카데미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이 포럼에는 15개의 이슬람 사원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청, 교육부 등 다양한 시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이슬람포럼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안전한 정보의 교환과 연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슬람포럼의 주된 테마는 다양하며, 특히 공존과 같은 상호이해와 협조에 관련된 것이다. 이슬람 포럼은 무슬림과 정부 간의 주요 조정자가 되어 베를린 통합정책을 주요 프로젝트로 받아들였다. 유럽위원회는 폭력과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이슬람포럼의 과제를 가장 의미 있는 지상과제라 하면서 지속적이고 진지한 공동 작업을 일궈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슬람포럼은 아울러 이슬람 성직자(Imam)를 훈련하여 시와 자치구들의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그들이 사회적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베를린에서 통합정책을 위한 이슬람 포럼의 긍정적인 노력들, 이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포럼에 초청하여 대화를 유도하고자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고, 반이슬람 정서와 반통합에 대한 이해관계를 높였다고도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에서는 최근까지도 이슬람 지역의 종교탄압에 대한 반이슬람 시위가 발생했고, 독일에서 높아진 반무슬림 정서 때문에 모든 이슬람 사원(모스크)을 폐쇄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16년 4월 18일)

라, 시사점

한국과 독일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전통적으로 동화정책을 고수하다가 오늘날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혼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두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이민국과는 달리 사회발전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외국이주민이 증가하였고 비슷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면서 문화의 갈등과 소외, 충돌 등을 겪고 있다. 다문화인의 인구비율이 다른 다문화국가들처럼 그렇게 높지 않으며 비교적 다문화사회의 역사가 짧고 분단국가로써 겪은 이질화된 동족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다문화사회 초기에는 다문화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동화정책을 실행하였으나 최근 다문화주의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분모일 것이다.

독일 베를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역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시민사회단체의 성격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학문적·정책적·사회적·교육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베를린시의 다문화 통합정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구성원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시민사회 NGO와 이주민 조직들의 활발한 협조를 통해 당면한

통합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의 배경을 가진 베를린시의 경험은 최근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맞서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차원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한국 다문화 정책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지금까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실시했던 다문화 정책을 지양하고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반시민과 외국인 관련업무 종사자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취합하고 지역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베를린시 정책을 참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5. 일본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일본에서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즉 일본총무성이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중핵적인 시책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동안 자신들의 사회 안으로 외국인의 수용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농촌지역의 남성들에 대한 결혼문제가 심각해지고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게 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에 한해서만 생활보호법을 적용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문화정책이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적응을 돕는 정책에 머물렀다. 그러나 일본 사회 안에서 다문화현상의 가속과 함께 일본 정부의 다문화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동향을 보면, 초반기에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외압과 국내의 노동력 수급 조절책으로서 관리와 통제의 영역에서 전개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다문화 공생(多文化共生)”정책을 폭넓게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스스로 내세우는 다문화정책의 핵심은 “다문화 공생주의”이다.

중앙정부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이 주요한 의제로 채택된 시기는 2006년 일본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의한 연구회」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요컨대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공생 시책과 일본 재계의 다문화사회 수용에 관한 입장 표명 등이 중앙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2006년 총무성이 비로소 전국적인 다문화공생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문화공생에 대하여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구성

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다문화공생 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등한 관계”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두 부분이다. 즉 이 두 가지가 일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공생 원리의 핵심내용이다. 다문화사회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분리주의에 의한 배제, 소수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발생하는 인권 문제 등이다.

배제와 차별은 불공정한 상태의 지속과 함께 차별하는 자와 차별받는 자 간의 집단적인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생”정책은 바로 대등한 관계의 형성을 필요조건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적이나 민족,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존중과 인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타자를 자신들의 문화 안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적응을 돕고 새로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대등한 관계”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다문화공생 원리가 일본 다문화정책의 핵심 원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대응 전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성공적 확산의 근거에는 지역중심(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큰 역할을 하였다. 즉 일본 정부는 일본 사회가 당면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향에 맞추어 지방정부, 기업, 지역주민이 다문화공생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 다문화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한국과 달리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비전과 시행세칙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다문화정책이 지역중심, 생활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활과 삶의 공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개발 운동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문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생활밀착형이 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생활밀착형정책은 다문화성원들에게 지역생활에서의 적응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정책 특징 : 다문화공생정책

일본에서 다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전까지는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1980년대에 뉴커머(New comer)가 증가함에 따라 비로소 새로운 외국인정책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다문화교육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 정부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정주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총무성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시구정촌(市區町村)에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현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라는 최초의 공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총무성의 이런 공표가 있기 훨씬 전부터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표방한 각종 다문화 사업을 펼쳐오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중앙 정부는 단지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춘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정부의 다문화공생 사업은 국제이주기관(IOM)의 이민사회복지 업무를 비롯하여 국제문화연구소(JIAM) 주관의 다문화 매니저 양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동경외국어대학 주관의 다문화사회 코디네이터 연수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지자체 주관의 사업으로는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만든 것 등이 있다.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은 외국인 주민의 수용 주체로서의 지역 사회 형성,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장(국제인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지역의 활성화, 이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의 조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시구정촌과 도도부현의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도도부현은 시구정촌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시구정촌은 외국인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지원, 생활 지원, 다문화공생 거리 조성, 다문화공생 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중점 과제로는 방재 네트워크 정비, 정보기반 정비, 지자체의 시책 추진 체제에 대한 정비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일본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1)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권한을 배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제기된 정책과제 해결이나 상충된 이해관계조정을 위한 관련 주체들 간의 협의 및 의사결정 행위이다. 이에 반해 거버넌스 체제란 관련기관 및 이들 기관들 간의 운영방식이나 제도, 그리고 기관 간이나 제도 간의 연계나 협의 및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문화 거버넌스의 의미는 “주요 다문화정책이나 다문화교육 등 다문화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파트너십의 구축을 통해 실시되는 다문화정책의 총체적인 체계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교육의 경우, 『정부-지역교육위원회-시민단체-학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 문제에 대한 부서별, 심의회별 검토나 대응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1988년을 기점으로 내각부, 외무성, 법무성, 총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2006년을 기점으로 총무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있어서 다문화공생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다문화공생 추진체계 등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총무성이 제안한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 추진시책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1)커뮤니케이션 지원 2)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 보건과 복지, 방재 등의 생활지원 3)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4)다문화공생 추진체제의 정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2) 다문화 거버넌스의 역할

중앙정부는 외국인 수용을 위한 기본방침,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일본어와 일본사회에 대한 학습기회의 제공, 외국인 주민의 소재정보 시스템 구축, 각 부서간의 종합적인 정책형성을 위한 체제정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다문화공생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다문화공생 지침과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책정, 추진한다. 그리고 국제교류협회나 시민단체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네트워크 체제를 만들어 간다. 기업은 노동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노동법을 준수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지역사회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연

계하여 외국인 주민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3) 지방정부와 다문화 거버넌스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는 다문화공생 시책을 위하여 시민과 행정 간의 협동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다문화공생 시책을 전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민관협력의 형태로 국제교류협회를 다수 설치하고, 국제교류협회에 파견된 지방공무원과 내부 출신 직원이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류협회는 일본 지방정부에서 다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다문화 시책을 위한 기초단체 간 정보교환,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회의 개최, 다양한 재정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일본의 독창적인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의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들어 시즈오카현에 있는 하마마쓰시는 일본계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가운데 하나이다. 하마마쓰시는 2001년 세계 도시화 비전을 설정하고 다문화공생을 국제교류협력과 함께 시정책의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2001년에는 외국인집주도시회의를 설립하여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 수용체제의 준비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하마마쓰 선언을 공포하였다

(4) 다문화교육에서의 거버넌스

다문화교육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에서 제도나 법령, 재원,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지자체나 외국인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에서 다문화공생 시책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일본 교육당국은 주로 지자체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학교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책개발과 프로그램의 주체는 지자체나 교육위원회, 그리고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한국 다문화교육의 거버넌스 체제는 중앙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부-시도 지역교육청-단위학교』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교육부의 요청이나 위탁에 의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를 교육부가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면,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을 거쳐 학교에 전달한

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정책개발과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형태이며 지역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 사례분석 : 후쿠오카시 다문화공생정책

후쿠오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후쿠오카에서 다문화공생을 전담하는 부서는 국제교류국 교류 제1과로, 이들의 주요 사업은 상담 창구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외국어 지원 사업이다. 이 밖에도 지구시민 강좌 및 다문화·다언어 육아교실을 개최하여 향후 다문화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범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인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의 폭력 상담, 재류자격 상담, 아시아계 외국어교실(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후쿠오카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 전문가, 교육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는 다문화인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여 이주 여성과 자녀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이래 매년 2-3회에 걸쳐 후쿠오카시 주관의 다문화공생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 모임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로 생활지원 사업, 교육환경정비 사업, 외국인 학생지원 사업 등이 논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각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생활지원 사업의 중점 시책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정보지의 제공, 외국어 방송의 실시, 법률 및 건강 상담, 행정 업무에 관한 상담 등이 있다.

교육 환경 정비에 관한 거점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일본어 지도 교원을 파견하고 다문화 상담 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학습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을 해 준다. 가령 후쿠오카시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효과의 상승을 위해 11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중학교에 전담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전문 상담 요원은 자원봉사자의 일회적인 파견에 그치고 있어 차후 개선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상담 교원을 상시 배치시킴으로 인해 성장기의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정체성, 언어, 대인관계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일본어 및 사회 교육으로 구성되며 총 6개월 간 22시간의 강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근 추가 강좌를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22시간을 더한 총 44시간까지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아직까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적 관점과 노하우의 전수 및 확산에 대한 지원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1년간 115명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사업이다. 또한 주택보증제, 생활용품의 제공 등 외국인 학생이 원만한 일상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확충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일본어 교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교류회관에서 학습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와 또래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이 밖에도 후쿠오카 국제학교에서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대학입학 국제자격) 제도를 운영하여 외국인 자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완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환경의 정비 차원에서 학생교류회관을 개방함으로써 도서관이면서 동시에 문화 교류와 방과 후 학습도 가능한 환경을 구비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의 주관으로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NGO의 협력 하에 귀국자녀를 위한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후쿠오카 여성엠폰워먼트센터(empowerment center)에서는 주로 이주 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아시아 여성을 위한 일본어 교실, 수제품 전시 및 판매, 다문화쉼터의 제공 등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1년에 와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큐슈국제FM에서 재해 정보 서비스를 다언어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활동은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재해(쓰나미, 홍수, 지진, 해일 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시사점

일본의 다문화공생 거버넌스의 체제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에 관해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다문화공생 정책 시행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외국인을 수용해가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공생 정책에 있어서 조례 등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민간단체까지 각 주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생활과 삶의 공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거버넌스로서의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과 그 역할분담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일본은 공공부분이 중심 주체가 되어 국제교류협회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다문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공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다문화 시책 상당부분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위탁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가 너무나 다양한 법령과 대책을 경쟁적이고 제시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부처 간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에서는 다문화도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간의 중요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대표적인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뉴커머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정부와 국제 교류협회가 모여서 2001년 하마마쓰시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다문화 거버넌스의 사례이다.

하마마쓰시 오이즈미마찌는 행정, 기업, 지역주민, 외국인 간의 다문화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초중등학교에 포르투갈어 학습도우미 배치와 일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후지중공업이나 산요전기 등 외국인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행정과 교육, 사회지원 등 다문화 거버넌스가 잘 구축된 지역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기업-지역주민-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6 싱가포르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열대기후에 속하는 도시국가로 1965년 8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관료 체제를 바탕으로 고도성장하였고, 국민소득이 일인당 5만달러가 넘는다, 520만의 인구를 가진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의 소규모 국가인 싱가포르의 인구구성은 중국계 77%, 말레이계 14%, 인도계 8%, 기타 유럽 및 아시아인 1% 등 소위 CMIO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종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이며 언어는 영어가 공용어이고,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와 기타 방언들을 민족별로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3세기경 중국문헌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16세기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다가 1819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세력에 의해 싱가포르항이 건설되었다, 2차 세계대전중 일본의 통치를 받았고 종전 후 다시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있었다, 1959년 영국으로부터 내부적이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며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에 포함된 후 1965년 8월 인종정책에 대한 갈등과 이념적인 차이로 완전 분리독립하였다, 강력한 정부의 통치아래 싱가포르는 급속도로 경제발전 하였고 사회정치적으로 안정된 체제를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민족국가인 싱가포르는 각 민족별로 다른 언어, 풍속, 문화, 습관, 종교를 가지고 민족 간에 상대방의 고유문화를 존중하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나. 정책 특징

싱가포르의 다문화 사회 형성과정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 영국의 이익을 위해 펼쳐진 분할통치정책, 2차 세계대전 말엽 일본의 싱가포르의 여러 민족에 대한 차등정책 그리고 1965년 독립전후 정치적 격동기에 나타난 중국인과 말레이인들 간의 민족갈등 사건이 중요하다.

19세기초 영국인 래플즈경이 무역과 전쟁의 양면에서 최적의 위치이자 영국 식민세력의 동남아 진출의 전초기지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후, 영국은 말레이반도의 주석산업과 고무농장에서 일할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남부로부터 대규모의 이민자들을 이주시키는 한편, 세력이 커져가는 중국인을 견제하려 인도 남부로부터 타밀인도 받게 되었다, 영국 식민당국은 중국인의 우월한 노동력과 근면, 검약 및 자신들의 치안을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 때문에 중국인을

선호했고, 백인 식민통치 경험과 유순함으로 인해 타밀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원주민들(자바인, 미얀마인)은 문화 및 세계관의 차이와 영국에 협력태도 등으로 노동자로도 부적합하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영국의 식민정책은 귀속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각 민족들이 같은 정치권에 속하지만 각각의 다른 공동체 속에서 사는 전형적인 복합사회로 보고 여러 민족 공동체를 통치 및 통제하였고,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독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3년간 지배한 일본도 싱가포르의 각 민족집단에 차별적 정책을 폈다. 즉, 일본은 중국인에 대해서는 깊은 증오를, 유럽인에게는 비우호적 관계를, 말레이인과 인도인에게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이는 식민 지배를 벗어난 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식민정치에서 벗어난 후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에 소속해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말레이 연방정부가 표방한 말레이인종 우선정책 때문으로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싱가포르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한편 부유한 중국인에 대한 말레이인의 반감은 말레이연방 속의 싱가포르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결국 싱가포르의 독립을 가져왔고, 이후부터 다민족, 다문화가 싱가포르의 핵심적인 특성이면서 해결과제가 되었다,

독립후 정권을 잡은 인민행동당은 여러 번의 중국인과 말레이인의 분쟁이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민족주의 정책을 강조하여 오늘날 매우 성공적인 다문화국가로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민족주의는 복합사회의 인구집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로 싱가포르에서 다민족주의는 정부가 모든 민족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싱가포르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다양한 민족이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아 번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 제도를 보장해주는 것과, 둘째는 능력위주사회 이데올로기를 다문화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실시된 다문화정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첫째, 다민족주의는 각 종족의 이질적 성격을 덜 강조하는 반면에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및 기타인 즉 CMIO로 한층 단순화시킨 4개의 다민족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민족 사회의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정치적 권위를 국가가 독점하는 대신 4개의 민족집단의 문화를 하위범주로 하는 싱가포르 문화를 창조하는 국가공동체주의 지향의 국민통합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국가의 전체 일원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민족을 위주로 하는 사회가 아닌 공존의 사회가 만들어져야하고 특정민족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둘째, CIMO를 기초로 다문화, 다민족, 다언어를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실시하

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중언어 정책인데 영어를 공식 언어로 각각의 민족집단이 가진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언어정책은 이질적 집단을 효율적으로 동질화 시켰다, 한편 인성교육도 실시하였는데, 인성교육은 민족 간의 이해와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주택개발청(HDB)를 만들어 새로운 주택단지에 건설된 공공주택의 배분 정책을 통해 인종혼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즉 인종쿼터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지역 저주 민족의 비율에 최대한계를 정하여 특정 민족이 특정지역에 일정비율이상 모여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역에 민족별로 적절한 비율로 같이 살게하여 각 민족들이 이웃으로 같이 지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존중과 상호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에서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문기술인력에게 취업허가를 내주어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방문사증을 발급한 후 취업허가를 발급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입할당제도를 채택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노동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다민족 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1988년 선거후 싱가포르인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 국민적 이데올로기를 가져야하고 국민적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모든 민족과 문화적으로 상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다문화 국가의 형성은 18세기 식민지정책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는 정부의 강력한 민족 조정정책으로 다양한 민족 구성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민족 상호간의 균형을 상호성의 원리를 통해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자 지식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가족,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소유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기본 학제는 6-4(5)-2(3)-3(4)으로 개인의 능력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나 학생 대부분은 약 10년간 교육을 받으며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나 능력별 실적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특징은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과 능력위주의 교육이다, 첫째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은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로 구성된 복합사회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의식을 양성하고자하는 것이다. 헌법은 각 인종

간 평등주의를 규정하여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언어교육을 중시하여 영어와 각 인종의 고유언어인 모국어 필수언어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하는 이중언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언어 교육은 이질적 집단을 효율적으로 동질화시켰고 언어에 대한 능력은 학업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싱가포르는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엘리트 교육을 중시한다, 능력주의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단계별로 판별하여 학생의 진로를 안내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의 기본과정 끝나면 국가에서 행하는 시험을 치르고 시험의 결과에 따라 엘리트 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으로 나갈 학생이 갈라지게 된다, 매 과정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정예만을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능력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되 능력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교육은 무자원의 나라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인적자원의 육성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교육정책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싱가포르의 교육기반이 되며 복합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 사례분석 : 언어교육, 다문화 현장학습장 등

싱가포르는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다문화교육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종합학교 제도와 이중언어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인종간의 화합의 날을 정하여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종합학교제도는 각각 다른 언어, 민족 출신의 학생들이 같은 건물 안에서 다른 언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민족, 언어의 벽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상호주의 경향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만족 간 화합을 체득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이중언어정책의 실시는 민족간의 공통어이자 실용적인 언어로서의 영어와 각 민족집단의 모국어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1957년에 채택한 4대 언어(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모두 공식언어로 인정하고 세계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4대 언어권에 동등성을 준 이중언어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중언어정책을 통해 싱가포르는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과 국제화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하여 동남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싱가포르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면서도 각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영어를 통해 다민족 공통 의사소통수단을 확보하여 상호이해를 촉진시켰고, 민족 간의 통합을 위한 중립적인 도구역할을 하였다. 모국어 사용은 각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민족 간의 긴장과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이중언어정책은 세계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공통의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다문화사회의 응집력과 활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였다.

(1)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

- 영어 교수요목의 주요 목표는 효과적인 언어 활용 개발임
 - 학생들의 언어 사용은 목적, 청중, 맥락,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언어 활용 능숙도는 학습 성취로 평가됨
 - 듣기 및 보기, 읽기 및 보기, 말하기 및 표상, 쓰기 및 표상, 문법, 어휘
- 모든 학생의 언어 역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국제 표준에 가장 가깝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임
- 기대되는 수준은 다음과 같음
 - 모든 학생들은 영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됨. 특히 문법, 철자, 기초 발음에 있어서의 기본 능력을 획득할 것임. 학생들은 일상 상황 및 길, 정보, 설명 제공 혹은 요청과 같은 기능적 목적에 있어 영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기 및 쓰기 모두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역량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학생들 중 몇몇 특출한 학생들은 요직 및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게 됨
 - 적어도 20%의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영어 능숙도를 갖추게 됨, 이러한 학생들은 다양한 직종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며 교육 분야와 미디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 학생들 중에서 영어권 국가의 최고 학생들과 다름없는 영어 구사력을 지닌 소수의 싱가포르 학생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음.

(2) 싱가포르 영어교육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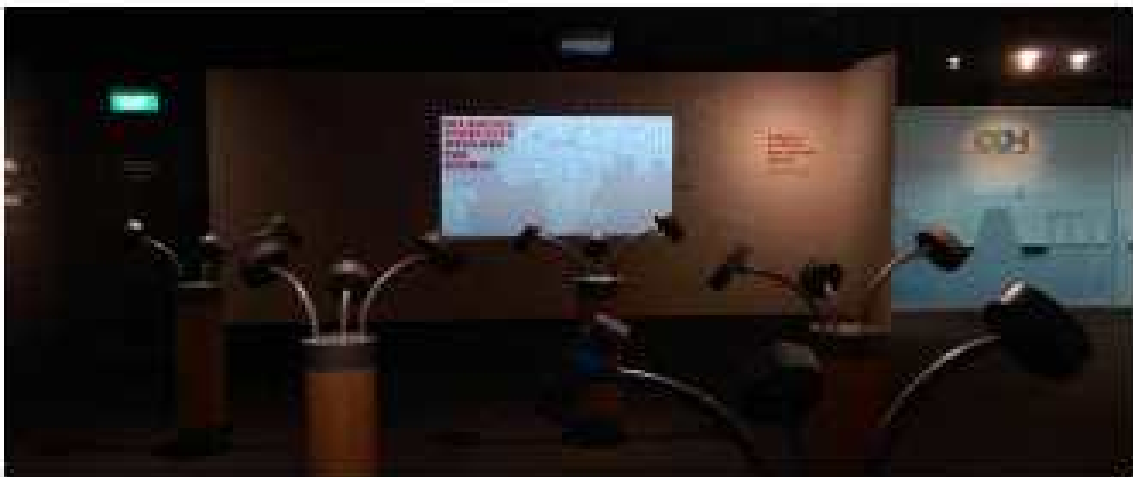
- 싱가포르에서의 영어 교육 목표가 단순히 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자신의 의사 표현과 생각의 전개를 목표에 두고 있음
-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이나 과정을 보면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영어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기 영어 교육을 중요시함
 - Lee Kuan Yew 기금은 pre-school level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어 조기 교육을 중시하는 싱가포르의 분위기가 반영됨.

- 대중(개인, 회사, 교육시설, 공공기관)에게 제안서 신청의 기회를 줌으로써 참여를 유도함
- 제안서 중 관련성, 영향, 확장성, 지속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지원기관 선정
- 학생 수준 향상을 위한 취학 전 및 학교교육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국어 지원도 병행함
 - 취학 이전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강화 : 영어의 조기 교육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계속해서 유치원 수준의 학생들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을 확대해옴, 이러한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서 낮은 경제적 수준에 있는 학생들 역시 더 높은 영어 능력을 갖출 수 있음
 -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더욱 강화된 지원 : 유연한 교수 접근법과 커리큘럼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까지 소규모 그룹에서의 교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더욱 강화된 지원 : 모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모듈식 프로그램과 함께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함, 교육부는 또한 모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에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셋째, 인종 간 화합의 날(매년 7.21)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싱가포르를 문화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조화로운 사회로서 되돌아보고 기념한다. 1998년 처음 시작된 인종간의 화합의 날은 학생들 사이에 인종간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국가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매년 대주제를 가지고 시행된다. 이러한 행사는 사회통합과 인종의 조화를 촉진하는 등 교육자, 학생,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행사가 된다.

넷째, 다양성 갤러리(Harmony in Diversity Gallery), 헤리티지 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따로 또 같이, 민족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조화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별로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헤리티지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문화 보존 및 자긍심 고취, 관광 자원화하고 있다. 차이나타운내 차이니즈 헤리티지센터, 아랍스트리트내 말레이 헤리티지센터, 리틀인디아 지역내 인디언 헤리티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민족문화 소개, 전시 및 강연, 교육, 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 센터(The harmony in diversity gallery)는 민족공동체와 정부기관이 함께 싱가포르의 다양한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하여 만들었다,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관이며 일반시민에게도 싱가포르의 인종, 종교의 다양성을 손쉽게 보여주고 있다.

< 다양한 미디어 >





<인디언(Indian) 헤리티지센터>



<차이나타운 헤리티지센터>

<말레이 헤리티지센터>

| "Hardware" | "Software" | "Heartwar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unity-centric town planning & development Shared spaces and facilities Mix flat types and sizes within each precinct, block and leve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hnic Integration Policy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Quo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y Nice Home Roadshow & Welcome Parties Heartland Greening, Good Neighbor Award Outreach efforts Public Education |
| | | |

<도시계획, 시설물, HDB건축 시 주요 고려사항>

싱가포르 다문화교육은 서로에 대한 이해, 존중, 유연성, 배려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사회생활과 통합을 지향하며,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인정하여 그들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이면에는 전체 인구의 싱가포르화를 추진하여 싱가포르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도록 국가애를 교육하고 있고 국가와 사회통합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라. 시사점

과거 민족간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현 교육정책에서는 민족간의 평등성과 민주시민사회로서의 책임감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첫째,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의 문화에 단순히 적응하고자 한 서구의 다문화와는 달리 식민통치와 분할정책의 유산으로 인종, 종교, 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다문화교육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에 따라 언어교육, 인성교육이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 유년기에는 차별적 교육이 필요하나, 학령이 높아질수록 국가적 목표에 바탕을 둔 통일적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는 소속집단의 언어와 종교지도와 더불어 언어와 종교의 다양성과 상호존중 필요성을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다. 현재 다문화사회의 형성은 세계화에 따라 이민족들이 국내에 교육과 취업의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나라의 인재들도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한 영어교육이나 타민족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가족들이 화합의 장을 교육현장에서 정례화하여 교육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특정문화, 특정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여행자 다문화라고 흔히 부르는 초기형태의 다문화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를 싱가포르처럼 교육현장에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다섯째, 다문화적 관점이 도시 하드웨어, 시설물 공간계획에 직접 접목되어 생활속에서 구현되고, 누구나 손쉽게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현장학습장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정책제언

□ 공교육밖 다문화가정자녀의 한국어 언어교육 집중지원

한국도 프랑스와 독일과 같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국어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습득이며, 한국어는 타 교과목(사회, 도덕 등)의 도구어로서 역할을 하기에 한국어 능 부족은 전반적인 학습 부진과 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문화인들이 현지 언어에 유창하면 그 만큼 현지인들과의 간격도 좁혀지고, 교육, 노동, 복지의 혜택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취업의 기회도 많아진다.

프랑스는 사회기관이 공교육 밖에서 언어학습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언어-문화 특별교실’을 고려할 수 있다.

독일 역시, 다문화 교육정책을 독일어 교육에서 출발한다. 독일은 이민자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취약한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부족한 언어 이해력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 실패의 원인임을 인지하고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고, 이것은 실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교육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서의 언어교육도 강조하고 있는 점 또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 이주민 모국어 및 상호문화존중 교육 강화

호주는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에 의하여 이중 언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주민 집단 지역에 같은 국가출신의 교사를 배치하고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자녀교육 관련 자료를 이주민 부모의 모국어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안내자료 등은 모국어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나 여타 사항도 자녀들이 커가고 많아짐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역시, 이중언어정책을 통해 싱가포르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면서도 각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영어를 통해 다민족 공통 의사소통수단을 확보하여 상호이해를 촉진시켰고, 민족간의 통합을 위한 중립적인 도구역할을 하였다. 모국어 사용은 각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민족간의 긴장과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이중언어정책은 세계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공동의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다문화사회의 응집력과 활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그 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호주와 싱가포르의 언어교육 정책이 주요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 시민단체,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정책 참여 활성화

독일 베를린시의 경우, 시민사회 NGO와 이주민 조직들의 활발한 협조를 통해 당면한 통합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의 배경을 가진 베를린시의 경험은 최근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맞서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차원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한국 다문화 정책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실시했던 다문화 정책을 지양하고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반시민과 외국인 관련업무 종사자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취합하고 지역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베를린시 정책을 참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행정-기업-시민단체-지역주민-다문화가족’과 함께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

일본정부는 다문화공생 정책 시행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외국인을 수용해가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공생 시책에 있어서 조례 등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민간단체까지 각 주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대표적인 다문화 거버넌스 사례이다. 하마마쓰시 오이즈미마찌는 행정, 기업, 지역주민, 외국인 간의 다문화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거버넌스의 한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기업-지역주민-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화합의 날’ 지정, 운영

호주정부는 1999년 반인종주의 운동으로써 함께 살아가기(Living in

Harmony)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매년 3월 21일을 하모니 데이(Harmony Day)로 하고 3-4월 두달 동안 콘서트, 다문화관광, 다문화강좌, 워크숍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통합과 소통을 꾀한다. 체육, 문화, 종교, 학술기관, 이주민단체, 원주민그룹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역시, 인종 간 화합의 날(매년 7.21)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싱가포르를 문화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조화로운 사회로서 되돌아보고 기념한다, 1998년 처음 시작된 인종간의 화합의 날은 학생들 사이에 인종간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국가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매년 대주제를 가지고 시행된다. 이러한 행사는 사회통합과 인종의 조화를 촉진하는 등 교육자, 학생,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데 의미가 크다. 이러한 화합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며, 상호간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시민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기관 설립·운영을 통한 다문화 시민교육 활성화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이 너무 강하여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을 시사한다. 현재까지는 다문화주의정책 추진에 큰 저항이 없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은 외국 선진국가 사례로 볼 때 안이한 생각일 수 있다.

선진국 역시, 주류사회는 새 이주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사회에 동화되기를 바랐으나 그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도 주류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교육기관에서 활발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램에 시민교육강좌를 확대 편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또한 다문화가족구성원들이 자체적인 강좌나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봉사점수 등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다문화지원기관의 민관정 연계의 구심점 역할 강화

프랑스는 교육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다문화 적응교육,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교육을 전담할 기관은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입안, 각종 콘텐츠의 개발과

제작 등은 물론 정책 전반에 관한 제언과 더불어 민관정을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운용중인 'CASNAV'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다문화·시민교육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다문화교육으로서 인권교육 연계 실시

다문화사회가 논의되고 있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려 인권이 확고히 보장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이주민들은 종종 차별을 받았다. 한국도 민주화에 따라 최근 인권 신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랫동안 높은 동질성을 유지한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문화, 인종, 종교 등에 대해 낯설어 하고 때로는 이들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며 심할 경우 폭력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호주인권위원회가 1984년 인권 교육과 취학전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교재를 발간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학교 및 시민교육 현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국제이해교육에서 요구하는 평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치와 문화 교류를 확장하여 삶의 영역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반편견교육과 다문화교육에선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인간애를 실천 하면서, 세계화교육에서 지향하는 세계인류의 공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 학습장 설치, 운영

싱가포르와 같이 다문화적 관점이 제도적으로 도시 하드웨어, 시설물 공간계획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다문화 현장학습장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민족별로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헤리티지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문화 보존 및 자긍심 고취, 관광 자원화하고 있다. 이곳에서 민족문화 소개, 전시 및 강연, 교육, 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 갤러리(The harmony in diversity gallery)를 설치하여, 다양한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관이며 일반시민에게도 싱가포르의 인종, 종교의 다양성을 손쉽게 보여주고 있다.

2. 맺음말

한국사회는 2000년대부터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새터민, 유학생, 재외동포 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확장 되었다. 이주의 증대와 세계화·지구화의 추세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이 형성되었다. 10여년을 훌쩍 넘은 2016년 9월 현재 한국사회는 거주하는 외국인인 203만 6,163명이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로 한국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한국사회의 빠른 다양화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우리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동일체 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를 위해,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경험하는 교육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동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시민교육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본 국제비교 연구에서 한국과 각 외국의 각기 특수한 문화,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적 사태를 둘러싼 구성적 측면과 정책의 흐름 측면에서 유사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의 특성은 각 국의 다문화 교육의 전개과정과 현상에서 서로 다른 측면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문제점과 주요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해 공교육 및 공교육 밖에서의 언어교육의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일반시민 대상의 상호문화존중 교육과 인권교육, 다양한 다문화 학습체험장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다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 소수자인 다문화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수자인 일반시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시민단체, 다문화인 등이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참여 활성화를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경(2012),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편
추병완(2012),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 교육 기제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편
양삼석(2015), 프랑스의 다문화 시민교육을 통해 본 한국의 시민교육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편
천호성, 이정희(2015), 일본 다문화정책의 정책기조와 특징, 한국사회과교육연
구학회
이경수(2011), 프랑스 다문화교육 정책 무엇이 강점인가,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이윤정(2014), ASEAN 국가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교육논총
김태희(2016), 다문화사회와 동화주의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과 호주의 다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김태희(2017), 사회통합정책과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의 방향성:독일의 사례비
교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조대훈(2015), 글로벌·다문화 한국의 '시민'과 '시민교육' 새로운 쟁점과 과제,
교육과학연구
변종헌(2016),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전망과 과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서기주(2015),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접근방법 연구, 문화교류연구
권용희(2016),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반편견교육, 세계화교육의 비교 연구,
다문화와 인간 제5권 제2호
이용승(2016),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김영란(2014),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연구:베를린시를 중심으로, 숭실사
이버대학교
박찬인(2012), 프랑스와 미국 다문화가정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적 갈등과 극복
박성혁(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김태형(2017), 한국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 방향 모색,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정종진(2011), 호주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전개 과정과 현황, 교육실천연구
장한업(2009),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오영훈 (2009).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류경애, 이재득(2016), EU 국가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유럽연구
이희창(2015), 국가 정체성 유형별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비교, 국가정책연구
박영준(2013), 일본의 다문화교육의 전개와 문제점,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박영준(2013), 한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고찰,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류영철(2016),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효율적 방안,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최무현, 김경희(2011),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
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유근환, 신현태(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의대학교
양승윤(2006),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대학교육
서은숙(2016), 중도입국(이민) 청소년 다문화교육, 동국대학교
양계민(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싱가포르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cy.gov.sg>

싱가포르 교육부, <http://www.moe.gov.sg>

싱가포르 내무부, <http://www.mha.gov.sg>

싱가포르 HDG: Harmony in Diversity Gallery, <http://me2.do/xNve9Bc8>

싱가포르 Indian Heritage Centre, <http://me2.do/FzvB9MVs>

싱가포르 Chinatown Heritage Centre, <http://me2.do/GVuIbq4j>

싱가포르 Malay Heritage Centre, <http://me2.do/GjSvWiAt>